

## → Issue&amp;Trend

# 미중 무역전쟁과 국내 금융시장에의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성배 실장(sungbae@kiep.go.kr)

미국과 중국의 세계 경제의 주도권 경쟁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의 대미투자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중국 또한 유사한 수준의 관세 인상으로 강력한 대응을 보였다. G20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으로 무역분쟁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잠재한다. 이러한 경쟁적인 행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되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의 GDP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전략적인 입지 확보가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BC카드 디지털연구소의 간행물 'Card Business Brief'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BC카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문의 및 인용 시, BC카드 디지털연구소(bcresearch@bccard.com)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이 만나는 자리로서 주목 받았다. 5월 9~10일 이틀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전망은 걷잡을 수 없이 어두워졌고, 결국 양국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만났고,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예고되었던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 인상도 연기되었다. 그 이후, 분쟁의 불씨는 한국과 일본 사이로 튀었고 우리의 관심은 발등으로 옮겨왔다.

미중 무역분쟁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 정치적 의도를 가진 힘 있는 개인의 횡포일까, 아니면 긴 호흡 아래 벌어지는 정책의 변화가 드러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증도 더불어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의 경과와 배경, 우리나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향후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미중 무역전쟁 경과 및 배경

### ■ 트럼프의 오랜 신념

1987년 9월 2일, 부동산 업자 트럼프는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보스턴글로브 등 미국 주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실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을 취한 해당 광고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수십 년 동안, 일본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왔다." 중동지역의 원유 수송 경로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국방비 지출 혜택을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들이 받고 있으며,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이들 국가의 비용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이러한 상황을 '위대한 미국'이 이용당하고 있으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조정 요구는 이러한 트럼프의 오랜 생각과 궤를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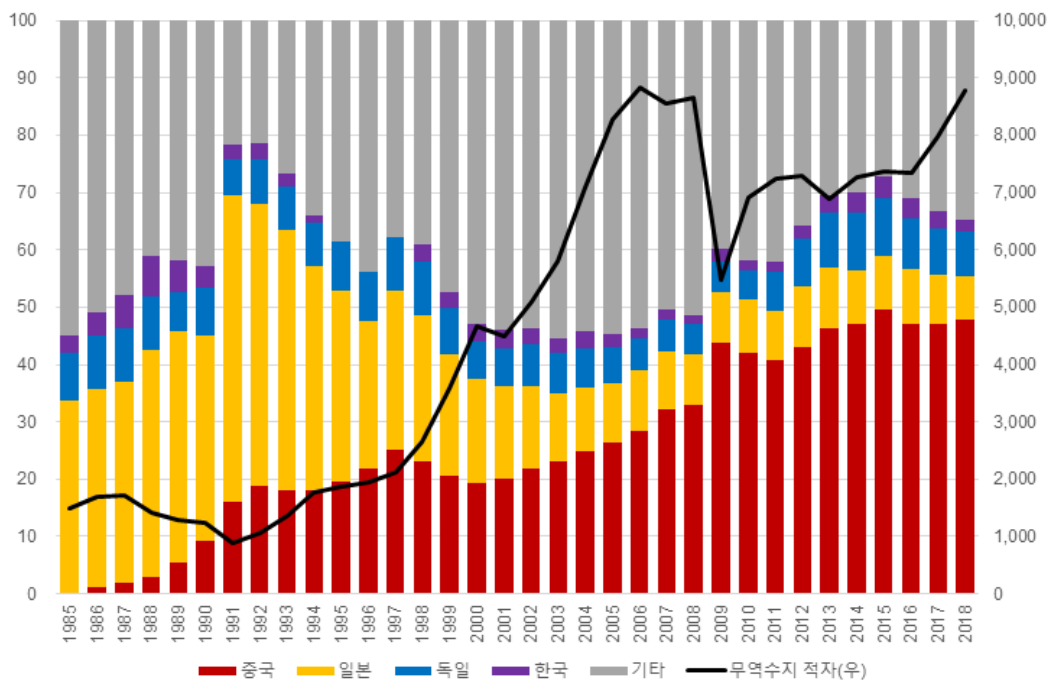
다른 정책적 이슈와는 달리, 무역에 대한 트럼프의 관점은 80년대 이래로 크게 바뀐 게 없다. 2018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용당하는 것을 지켜보기 싫을 뿐이라며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넘쳐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 및 다른 나라와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뉴욕의 치열한 부동산 업계에서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어 자신이 규정한 영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거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위 트럼프 판 '공정한 무역'이다.

## ■ 중국의 부상

미국의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1980년대 후반 점차 감소하며 1991년 87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6년에는 8,822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기간 주요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의 약진이 눈에 들어온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비중은 35% 전후를 차지하다가 1990년대 초반 53.4%까지 확대 후 2018년에는 7.7%까지 줄어들었는데, 이 기간 동안 중국은 1985년 0.25%에서 1991년 10%, 1996년 20%, 2007년 30%, 2009년 40%를 넘어서며 2015년에는 49.6%로 미국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2012년 3,000억 달러를 넘어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2018년 4,191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무역적자의 측면에 미국의 관심이 중국에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림 1]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국가별 비중 (단위: %, 억 달러)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력을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무역수지 불균형이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나타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세계 경제의 패권을 둔 양국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 패권의 장기 구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면서 미국의 압박도 강화되는 모양새다.

중국의 부상에는 덩샤오핑이 1987년 제시한 '원바오(溫飽)-샤오강(小康)-다통(大同)'의 3단계 국가발전전략 '삼보주(三步走)'가 있다. 원바오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된 상황을, 샤오강은 국민의 삶이 안정되며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된 상황을, 다통은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다 같이 잘 사는 상황을 나타낸다. 각각 개도국에서 중진국으로 이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중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덩샤오핑 후계자인 장쩌민은 2002년 샤오강 사회 진입을 선언하며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시진핑은 2012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로 올라서면서 '중국몽'을 제시하였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강 사회를 달성하는 한편, 2017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까지 다통 사회 건설을 통해 미국을 넘어서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 실현을 목표로 선언하였다.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역량 강화, 경제 패권국으로의 발전을 위한 역할과 정체성 확립 등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인 '일대일로',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미래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둔 혁신발전 전략인 '중국제조 2025'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 ■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승리로 이끈 선거 전략에는 미국 중서부 5대호 연안의 '러스트 벨트' 공약이 있다. 과거 자동차, 철강 등 미국 제조업 중심지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었으나, 이제는 노후 도시로 전락하여 더 이상 미국의 견조한 성장의 과실을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재선 레이스에서도 중점적으로 쓰이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의 표어는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시다(Let's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차용하고 있다. 이 단순한 구호는 다양한 대내외 도전

속에 미국의 패권을 지켜냈던 당시의 향수를 불러일으켜 지지율을 구축·유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레이건 행정부는 70 년대를 지배했던 석유파동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안정시키고, 1985 년 플라자 합의를 비롯한 일련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으로 경제 패권을 향한 일본의 부상을 누그러뜨렸으며, 외교적 압박과 협상을 통해 소련 및 동구권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러한 경험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외교·통상정책의 기초를 이해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이 주도하던 자유무역에 근거한 통상질서와 배치되는 조치들을 발표하고 시행하였다. 먼저, 기존에 합의된 다자 및 양자간 포괄적 무역협정을 재협상의 장으로 돌려놓았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대표적 통상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 의 재협상을 추진하였다. 또한, 일부 수입 품목에 대한 제한적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수입제품의 영향으로 특정 산업이 입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통상법 201 조에 따라 수입산 대형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표(2018 년 1 월 22 일)하였다. 한편,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입품목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라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2018 년 3 월 1 일)를 결정하였다.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도 추진되었는데 이의 최종 결정은 EU, 일본 등 주요 대상국과의 협상을 위해 180 일간 연기된 상황(2019 년 5 월 17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한미 FTA 발효 5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국의 재협상 압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힘입어, 2018 년 3 월 개정 범위와 주요 쟁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고 개정의정서가 2019 년 1 월 1 일 발효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사전 협상의 길을 열었으며, 무역규제조치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이 일부분 통제되었다.

## ■ 미중 관세분쟁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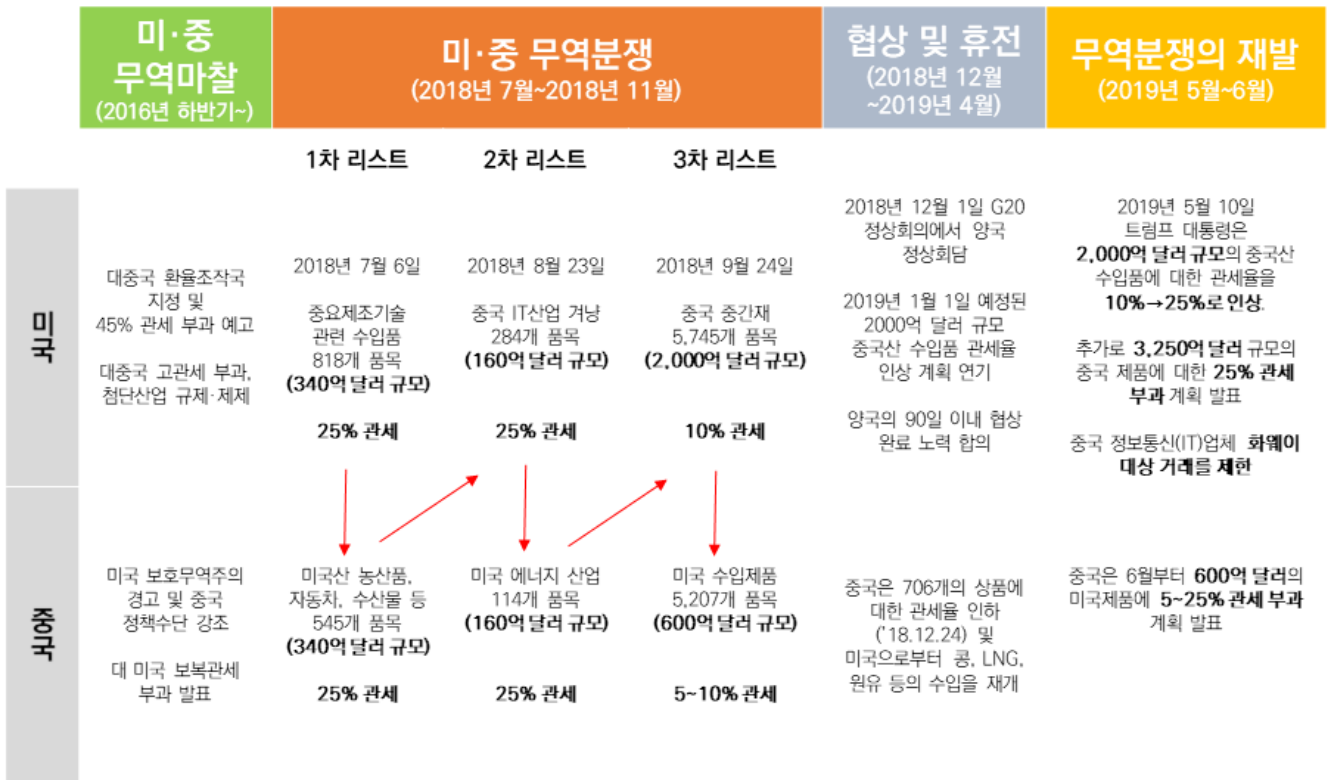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이 특정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반해, 불공정무역제도 및 관행에 대해 발의 가능한 통상법 301 조에 따라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조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2017년 8월 14일)함으로써 중국을 직접 겨누는 무역전쟁이 가시화되었다.

미중 양국간 관세분쟁의 성격이 먼저 가속화되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에 의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와 중국의 대미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2018년 3월 22일)에 서명하였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수입품에 대해 유사한 규모의 동일한 추가 관세를 주고받으며 관세분쟁을 심화시켰다. 미국은 1차 리스트로 중요제조기술 관련 대중 수입품 818개 품목(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2018년 7월 6일)하였는데 중국은 미국산 농수산물, 자동차 등 545개 품목(3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2018년 8월 23일에는 미국이 중국 IT 산업을 겨냥한 2차 리스트, 284개 품목(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발효했으며, 중국도 미국 에너지 산업 114개 품목(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상으로 맞대응하였다. 미국은 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중간재 5,745개 품목(3차 리스트)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이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수입제품 5,207개 품목(6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5~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관세율 인상을 예고하였다.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미중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3차 리스트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2019년 초반 진행된 양국의 무역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고, 미국은 5월 10일 3차 리스트의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전체 2,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5일 트위터를 통해 아직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5월 13일 USTR은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장난감, 연필깎이 등 소비재 중심의 3,805개 품목(3,000억 달러 규모) 리스트를 공개하고 6월 17일 공청회를 공고하였다.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더 이상 추가 관세부과를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편, 미국이 거래 제한을 추진했던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Huawei)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면서 견잡을 수 없이 번져가던 미중간 무역전쟁은 잠시 숨을 고르는 상황이다.

[그림 2] 미중 무역분쟁의 전개



## 2. 미중 무역전쟁의 사회경제적 영향

### ■ 경쟁적 관세인상의 직접적 영향과 불확실성에 따른 거시적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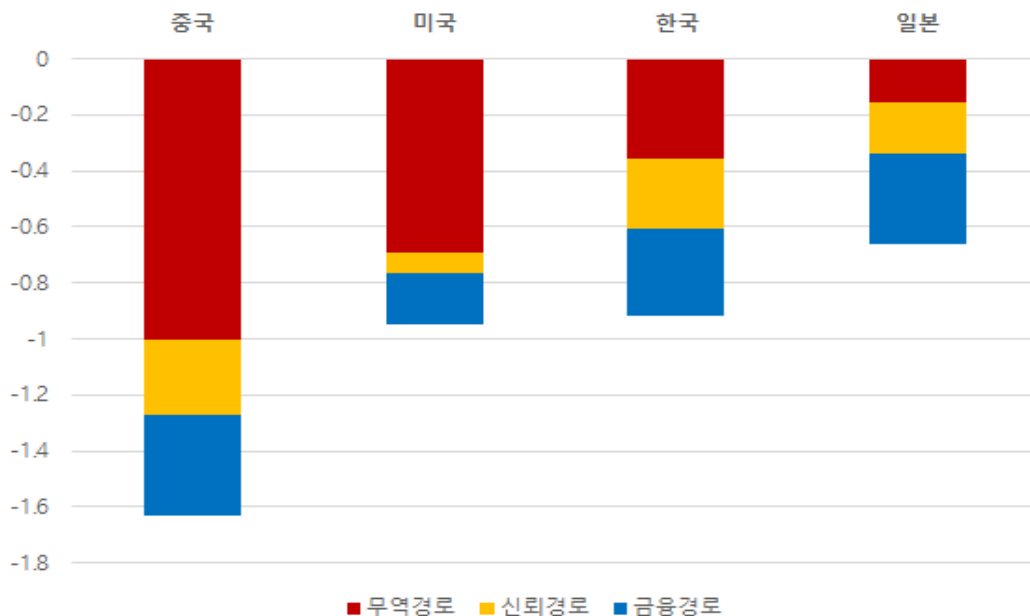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쟁적 관세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으나 거시 및 금융 경로를 통해 영향이 배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2,500 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및 대미 수출이 13.6 억 달러 감소(2017 년 총수출액 대비 0.28%)하고, 산업생산은 2017 년 GDP 대비 0.2% 수준인 32.6 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양국의 경쟁적 관세인상의 결과 상대국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각국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우리나라의 양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과 양국 및 제 3 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의 감소, 그리고 관련 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진 결과이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18 년 총수출액의 각각 26.8%와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 등 제 3 국에 수출된

중간재가 양국에서 최종 소비되는 제품으로 조립·생산되는 경우도 빈번함을 생각하면 수출 및 생산의 감소 규모가 우려한 것보다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래에 대한 기대형성과 금융시장 등 거시적 효과를 고려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무역경로는 미중 양국이 상대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수입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여 일본, 한국 등이 대미 수입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한 경제적 영향을 나타낸다. 중국은 무역분쟁이 없는 경우 대비 GDP가 1% 감소하며, 미국은 0.69%, 한국은 0.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경로는 무역분쟁의 심화에 따라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악화되어 미국의 투자가 축소된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의 GDP 감소폭이 크지 않지만 중국과 한국의 GDP는 약 0.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 등의 소비 및 투자심리 악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금융경로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 확대에 의해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영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 가지 경로의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GDP는 약 0.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 미중 무역전쟁의 경제적 영향 (단위: %)



주: 무역분쟁이 없는 경우와 비교한 GDP 변화 비율.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2018.10).



## ■ 환율전쟁으로의 확산 가능성

관세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대국의 관세인상을 우회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인위적 통화증발이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통화 가치의 하락을 유도하기도 한다.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불균형을 통제하기 위하여 미국 재무부는 매년 2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반복적으로 지정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개정이 추진된 무역협정에는 직간접적으로 인위적 환율조작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 이것이 미국에게 민감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지난 5 월 23 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달러화 대비 자국 통화가치를 저평가시키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상계관세규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현행 규정이 환율로 인해 발생된 보조금, 즉 통화보조금의 혜택과 특정성 판단방법을 적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통화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는 상무부가 판단하지만, 통화저평가 여부 및 수준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평가가 수반되어야하는데, 이는 다시 환율보고서의 내용으로 연결된다.

우리나라가 반복적으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고는 있으나, 현재의 기준이 유지된다면 다음 환율보고서에서는 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중 마찰이 위안화의 의도적 저평가로 귀결되는 경우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면서 원화 가치가 빠르게 하락했다.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요인은 위안화의 변동이다. 최근 들어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가 강화되고 있다. 2019 년 5 월 기준으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 변동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인덱스가 18%,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5 년 말까지 위안화의 영향력이 10%에 미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근래에 동조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환율로 나타나는 통화가치의 변화는 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함과 동시에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환율조작 여부의 판단은 상대국의 정책 의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된다. 급부상한 중국이 패권을 향한 야심을 드러내었을 때, 미국은 게임 참여자의 인티그리티(integrity)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려 시도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미국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협상 과정을 통해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미중의 갈등은 이러한 측면에서의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미국에서 이 과정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인티그리티에 대해서 미국 유권자의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3. 미중 무역전쟁의 과제와 대응방안

#### ■ 기술패권과 첨단산업: 5G와 화웨이

소위 4 차산업혁명과 관련 지어 보면,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2015 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중국 정부는 '국가반도체산업 투자펀드'를 만들어 1 조 위안을 투자하고 반도체 자급률을 2015 년 15%에서 2025 년 70%로 끌어올리는 반도체 굴기를 계획하였다. 오바마 정부에서도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급과 해외로부터의 기술이전을 견제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중국의 여러 반도체 기업이 기술혁신 속에 흥망을 거치면서 화웨이가 5G 이동통신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된다.

5G 기술은 클라우드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등을 실현시키는 기반기술이다. 통신장비업체는 중국의 화웨이를 필두로, 유럽의 노키아와 에릭슨,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등이 뒤따르고 있는데, 5G 통신 네트워크가 차세대 국가 기간망을 형성하는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의 화웨이에게 선뜻 주도권을 넘겨주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화웨이의 장비가 백도어를 통해 안보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동맹국을 중심으로 가까운 나라들에게 장비사용을 포함한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기술적으로 앞서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G20 정상회의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협상 모드로 회귀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잠시 멈추었다.

네트워크 장비는 기술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신뢰성 있는 테스트베드에서의 운영을 통한 시스템 최적화가 매우 중요하다. 지난 4 월 3 일 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가 시작된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미중 분쟁으로 화웨이 장비의 도입이 주춤한 사이 시스템 최적화에서 한발 앞서 나가며 기술적 격차를 줄여갈 기회가 열린 것이다.

## ■ 한국의 전략적 입지 확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무역전쟁은 여러 층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관세와 환율 등을 통한 무역불균형의 조정과 불공정 관행의 시정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깊은 이면에는 패권을 둘러싼 미중의 경쟁, 그리고 상호 불신이 존재한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보다 공정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레이스를 살펴보면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 등의 통상정책도 자유무역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시진핑의 중국은 중진국 입구에서 국가간 제도적 차이를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두 체제는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이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될지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

선진경제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국제사회로부터 단단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경제의 투명성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천착하지 않고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원칙에 기반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원칙은 국제규범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 기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에 힘써야 한다. 지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분쟁으로 세계경제가 축소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렇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 비전을 놓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입지 확보를 위한 대승적 정책을 수행하며 나아가야 한다. [끝]